

日제품 불매운동 참여 국민 63%

한국당 지지층·보수층에서도 참여자 늘어 대구·경북 전주 대비 26.4%p 가장 큰 폭 상승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참 의사가 다수였던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도 참여자들이 큰 폭으로 늘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24일 tbs 의뢰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참여 여부와 향후 참여 의사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를 벌였다고 25일 밝혔다.

이 결과 현재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한 국민은 전체

의 62.8%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1차 조사에서는 48.0%, 일주일 뒤인 17일 2차 조사에서는 54.6%였다. 매주 7~8% 가량씩 늘어난 것이다.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7.0%p 감소한 32.4%로 조사됐다.

'향후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68.8%로 2차 조사(66.0%)보다 2.8%p 늘었고 '향후 참여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26.4%로 지난 조사보다 1.6%p 줄었다.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제외한 거의 모

든 지역과 연령, 성별, 이념성향 등에서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당 지지층은 '현재 불참' 응답이 다수였고 보수층에서는 '현재 참여'와 '현재 불참' 응답이 각각 절반 수준으로 비슷했다.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무당층 61.1%, 정의당 지지층 83.7%, 민주당 지지층 77.8%, 중도층 62.9%, 진보층 76.1%였다.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무당층 61.1%, 정의당 지지층 83.7%, 민주당 지지층 77.8%, 중도층 62.9%, 진보층 76.1%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지난주 39.3%에서 65.7%로 가장 큰 폭(26.4%p)으로 상승했다. 다음으로 ▲대전·세종·충청(42.9%→68.3%, 25.5%p ↑) ▲서울(47.1%→65.3%, 18.2%p ↑) ▲경기·인천(64.8%→67.0%, 2.2%p ↑) 등이 뒤따랐다.

연령별로는 ▲30대(57.9%→72.1%, 14.2%p ↑) ▲20대(51.1%→64.1%,

13.1%p ↑) ▲40대(62.1%→72.7%, 10.6%p ↑) ▲50대(55.7%→61.2%, 5.5%p ↑) ▲60대 이상(48.1%→49.7%, ▲1.6%p ↑) 순이었다.

한국당 지지층도 지난주 30.3%에서 37.7%로 7.4%p 올랐고 보수층도 35.5%에서 47.8%로 12.3%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9180명 중 504명이 응답해 5.5%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법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뉴스스

등검은말벌·환삼덩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

환경부는 등검은말벌과 환삼덩굴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관리한다고 25일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된 생물종을 말한다.

등검은말벌은 양봉 농가에 침입해 꿀벌을 사냥해 이른바 '말벌 사냥꾼'으로 불린다. 토종 말벌류의 생장을 저해하고 도심지 내 서식 개체 수가 늘면서 쓰임에 의한 인명 사고도 초래하는 실정이다.

2003년 부산 영도 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라산림, 농촌, 도시를 구분하지 않고 매년 평균 124km의 속도로 확산해 현재 경기와 강원까지 퍼진 상태다. 중국산 목재를 실은 무역 선박을 통해 여왕벌이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환삼덩굴은 도로와 하천변의 양지에 주로 서식하는 일년생 덩굴 초본이다.

생장이 빠른데다 주변 식물들을 뒤덮어 다량 생물의 성장을 억제한다. 다량의 꽃가루를 날려 알레르기 유발하는 등 인체에도 해로위 7~9월경 꽃이 피기 전 신속한 제거가 필요하다.

이로써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생물종은 총 22종, 1속으로 늘어났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재배·유통이 금지된다. 위반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뉴스스



바둑에 빠진 아이들 25일 서울 여의도 63문화생명빌딩에서 '제19회 한화생명 세계어린이국수전' 결승전이 열리고 있다.

'SRF 분쟁' 담양 환경연대, 전남도 행정심판 무효 소송

담양지역 주민들이 고형폐기물(SRF) 확대사용 승인을 놓고 업체 측 손을 들어준 전남도 행정심판은 문제가 있다며 무효 소송을 청구기로 했다.

25일 담양군에 따르면 SRF 환경분쟁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대전면 피해 주민들이 전남도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담양군이 주민 행복추진권과 쾌적한 환경권을 이유로 SRF 확대사용 불승인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지난 3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승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회사측 손을 들어준 데 대한 법적 대응이다.

앞서 상자용 판지 제조업체인 한솔페이퍼텍은 "전체 연료의 30%를 차지했던 SRF를 100%로 확대하겠다"는 요구를 담양군이 거부하자 담양기

관인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업체 측은 나아가도 행정심판 결정내세워 균을 상대로 '1일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행정위에 '간접경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잠재적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수 십년간 환경오염에 노출돼온 주민들은 참다 못해 집단행동에 나섰고,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를 구성하고 집회를 통해 "마을 한복판에 연간 1만950t의 환경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악취와 소음, 폐수, 특히 소각시설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으로 주민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과 서명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담양군 역시 불법 약정행위에 대해 수 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영산강물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

도록 영산강 홍수통제소에 의견을 제출한 데 이어 국유지 무단사용을 이유로 회사 대표 등을 고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회사 측은 "보복 행정"이라며 최형식 군수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대 맞서고 있다.

한편 한솔페이퍼텍은 1983년 설립된 양영제지를 시작으로 두림제지, 대한페이퍼텍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연매출은 1000억원 안팎에 이른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인접해 대전면 전체 주민 4500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대치리 8개 마을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 대기질 오염 등을 호소하며 수년째 민원을 제기해오고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신안 천사대교 사장교 구간 '흔들'

제어장치 설치키로

지난 4월 개통한 전남 신안 천사대교 일부 구간에서 흔들림이 느껴진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운전자 불안감 해소 차원의 일환으로 시공사에 보안을 요청했다.

25일 익산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개통 초기부터 천사대교 사장교 구간에서 흔들림이 감지돼 불안하다는 운전자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익산국토관리청은 시공사에 능동 제어장치 등의 보안을 지시했다. 보강작업은 오는 9월까지 이뤄진다.

흔들림 현상은 6~11m/s 세기의

바람이 불 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2 진도대교의 경우에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 제어장치를 보완했으며, 이후 운전자들의 민원은 제기되지 않았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설명했다.

익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개통 초기 회의를 거쳐 보안을 요청했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운전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신속히 보완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 압해도와 암태도를 잇는 국도사에 능동 제어장치 등의 보안을 지시했다. 천사대교는 국내 최초로 하나의 교량에 사장교와 현수교가 동시에 배치된 다리다.



이런판결 저런판결

현재 "긴급조치 배상 대법원판결 취소 안돼"...합헌 재확인

"위헌 결정된 법령 적용한 재판 아냐" 각하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폐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판결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현재는 25일 A씨 등이 제기한 판결취소 및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위죄를 확정받았으며,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불법 수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관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사건을 각하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대대적인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자, 이들은 판결취소 청구와 함께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 재판을 제외시킨 헌법재판소법을 위헌이라며 이 심판을 청구했다.

현재는 "2016년 6월 현재는 헌법소원이 금지되는 '법원 재판'에 헌재가 위헌 결정된 법률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하는 건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다"며 "이 사건 헌재법 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내용

이 축소됐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판결취소 청구도 "대법원판결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 해도 그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해석에 따라 국가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헌재가 위헌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다"라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다만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헌재가 위헌 결정된 법령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및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적극적으로 침해한 총체적 불법행위에 국가 책임을 부인하는 재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가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전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도 정한 개정 전 민주화보상법 조항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보상이 이뤄졌음을 전제로 하는데, A씨는 적절한 배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취소 의견을 냈다.

뉴스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 [고객센터 1577-1000]